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형 | 개 정 안 |
|---|---|
|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p> <p>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u>2년간</u> 재임한다. 다만, ----- ----- 재임한다.</p> |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p> <p>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u>1년간</u> 재임한다. 다만, ----- ----- 재임한다.</p> |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주택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써 주택을 떠난 우리의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중 아직도 내집하나 갖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이 약 40% 이상되며 불행하게도 이 계층에서 무허가 건축물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얹힌 상태에서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거주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은 범법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나 또 한편으로는 이해와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이런 아픔을 잘 파악하여 지난 1981.12.31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1985.6.30까지(3년 6개월간) 시행하여 이 계층의 저소득 주민에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주요 내용은 1981.12.31 현재 사실상 완공된 85㎡이하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로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안에 있는 건축물은 준공 필증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생업에 바쁘고 또한 무지한 관계로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도 상당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이 무허가인 관계로 수도, 전기 등 각종 기본적 혜택은 물론 재산 활용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 창조와 더불어 전 국민의 지지와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물결에 소외 계층도 동참하고 또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 준다는 뜻에서 1981.12.31 제정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대통령령 제3533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번 더 이와같은 특별법을 가능한한 조속히 제정하여 주실 것을 남구의회 의건을 집약하여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7.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장 이철형외 의원 일동